

한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합의 실패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요청 특별히 반응 없어" "우리도 한일 안보 틀 영향"...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1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앞두고 마지막 담판에 나섰으나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오전 8시 47분(현지시간·한국시간 10시47분) 방콕 그랜드 센타라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요

청을 분명히 했으나 특별히 반응이 없었다"면서 "그것이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 관계에 올 엄청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강 장관은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원인이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얘기했다"고 대답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강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거듭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일측의 반응은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서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될 경우 현재까지와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매우 우려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이 고민을 해왔지만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간극이 더 커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제산업성(경산성) 등 관계기관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을 보면 현재로서는 각의 결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강경화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얘기했듯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 간 최대한 절차적으로 일본 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일본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다"면서 "일본은 기존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1+1(한국기업+일본기업) 기금안'이나 강제징용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양측이 잘 알고 있고 향후 협의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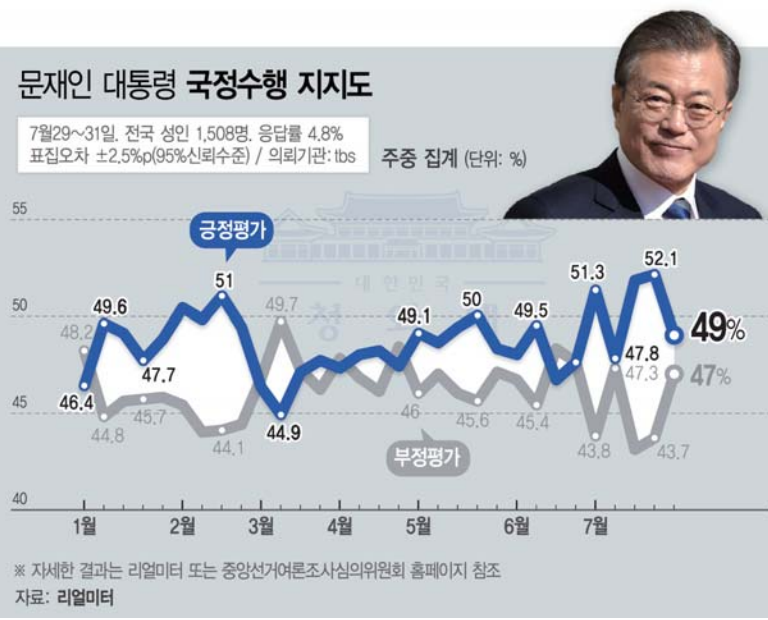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성과에 대해 "일단 우리로서는 엄중하게 메시지를 다시 전달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로서는 충분히 명분을 입각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 책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아니라 상대편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마지막으로 충분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에 따른 일측 반응을 보면서 대응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케이(産経)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아마리 아카리(甘利明) 일본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될 지와 관련해 "100%"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지난 6월28일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한 달여 만에 마주 앉았다.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文 지지율, 40%대 후반으로 하락...잇단 北 안보 위협 영향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잇새 만에 북한이 신행 방사포 2발을 발사하면서 안보 위협이 고조되자 50%선을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공·부정 평가의 격차는 2%p로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실시한 7월 5주차(7월29일~31일)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3.1%p 내린 49%(매우 좋음 27.3%, 잘하는 편 21.7%)를 기록했다. 1일 밝힌 49%를 기록한 이후 오름세가 꺾이며 50% 선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보다 3.3%p 오른 47%(매우 잘못함 33.1%, 잘못하는 편 13.9%)를 기록했다. 공·부정 평가의 격차는 2%p로 오차범위(±2.0%p) 내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0.2%p 감소한 4%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24일 일간집계에서 54.4%까지 찍은 후 다음 날부터 내림세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리얼미터 측은 "이와 같은 변화는 몇새 간격으로 두 차례 잇따라 발생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여파"라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중도

층, 진보층, 충청권과 서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세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0.3%→43.4%, 부정평가 51.6%) ▲서울(54.0%→47.1%, 부정평가 49.0%) ▲대구·경북(37.9%→33.8%, 부정평가 64.2%) ▲부산·울산·경남(42.8%→39.9%, 부정평가 57.1%)에서 주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60.6%→47.4%, 부정평가 48.6%) ▲20대(51.5%→49.6%, 부정평가 43.2%) ▲60대 이상(39.4%→38.1%, 부정평가 57.3%),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3.8%→20.3%, 부정평가 78.4%) ▲중도층(50.9%→48.5%, 부정평가 49.1%) ▲진보층(78.3%→77.0%, 부정평가 18.9%)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3만1246명에게 통화해 시도한 결과 최종 1508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나경원 "또 북한 눈치 보는 대통령...가짜 평화장사 말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끝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불참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난국에 대통령은 안 보였다"라며 "집권 세력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가짜 평화 장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제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당초 예정됐던 운영위 회의를 전격 연기해왔다.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한 청와대일지라도 엄중한 국가 안보적 위기 앞에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회의를 열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지만 또 봐야 했던 것은 북한 눈치 보는 대통령, 북한 눈치 보는 청와대였다"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도 없었다. 프랑스도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도 비공개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우러 표명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상 영도 수호할 책무는 이제 대통령에서 안보실장으로 격하됐다 보다. 안보는 아무리 강중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李총리 "갑질 근절 갈 길 멀어...보완점 많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민간 부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가 없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뎀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7월16일부터 시행,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며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의 대책을 논의한다"며 "그들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 그래서 갑질의 문제가 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할 것이나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각 분야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 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오는 204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항만시설 자동·지능화로 연간 불동량 처리능력이 30% 증가하고, 하역과 보관의 장소로 기능하던 항만이 첨단 선박 수리·물류 거점으로 변모한다"며 "그렇게 되면 항만들이 500개 이상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5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6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